

오픈뱅킹(Open Banking)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박 정 국*, 김 인 재**

목 차

요약

- | | |
|---------------------------|-------------------------|
| 1. 서론 | 3.2 시스템 측면 |
| 1.1 Open Banking 개념과 연구배경 | 4. 오픈뱅킹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과 과제 |
| 1.2 Open API와 금융정보 공유 | 4.1 오픈뱅킹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 |
| 2. 문헌연구 | 4.2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
| 2.1 오픈뱅킹 등장 배경 | 5. 맺음말 |
| 2.2 주요국의 오픈뱅킹 정책동향 | 참고문헌 |
| 3.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 | Abstract |
| 3.1 제도적 측면 | |

요약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오픈뱅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흩어져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순 집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서비스의 표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금융서비스의 융합과 차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표제어 : 오픈뱅킹, 오픈 API, 제 3자의 접근성, 지급결제 산업지침, 금융결제 인프라

접수일(2020년 1월 31일), 수정일(1차: 2020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2020년 3월 27일)

*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인증기획팀 팀장, arspark@kftc.or.kr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ijkim@dongguk.edu

1. 서론

1.1 오픈뱅킹 개념과 연구배경

2019년 10월 30일 주요 은행들의 시범실시를 신호탄으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오픈뱅킹(Open banking)시대가 개막되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작된 오픈뱅킹은 표현 그대로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여 공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Fig.1-1>과 같이 오픈뱅킹은 구체적으로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개방형 통신채널을 통해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로써 개방형 금융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그간 독점해온 금융정보의 개방을 넘어 광범위한 기업들이 이 정보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고객이 동의하면 특정 앱(App) 하나로 타 은행에 있는 계좌와 자산에 대한 조회, 출금 등이 가능해지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이동권(통제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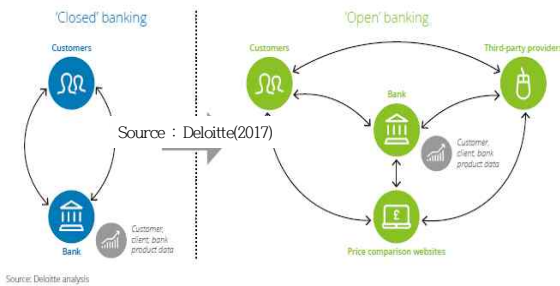


Fig. 1-1 Closed Banking & Open Banking Components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비금융회사가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 또한 외부와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오픈뱅킹에 주목하고 있다(Kim et al., 2019). 은행이 제휴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 사업자에게 개방형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오픈뱅킹 정책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은행이 필요에 의해서 외부와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므로 이러한 현상도 넓은 의미에서 오픈뱅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eo, 2019).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동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Open API와 금융정보 공유

은행은 오픈뱅킹 환경의 구성요소인 고객, 은행, 제3사업자 간에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바로 사용하는 기술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이다. <Fig.1-2>와 같이 API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기능이나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미리 정한 통신규칙이다. 해당 API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에 따라 해당 회사·기관 내부에서만 프로그램 접근 가능한 폐쇄형(Closed)과 회사·기관 외의 제3자에게 프로그램 접근을 허용하는 개방형(Open) API로 구분한다. 사업자는 API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Mckinsy & Compan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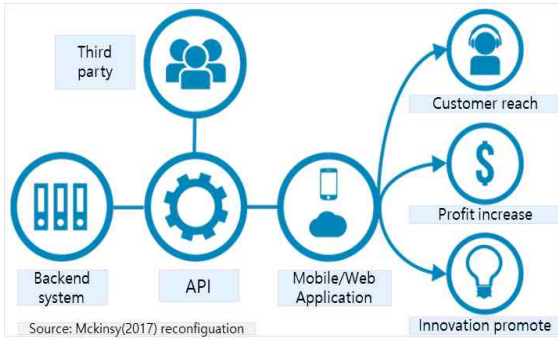


Fig. 1-2 API Concept

최근 들어 금융산업은 고객정보의 수집·공유에 따라 데이터와 금융이 교차되는 현상으로 Open API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Agustín, 2018). 금융서비스에서 Open API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가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으로 전송시키면 그 시스템에서 결제·송금 등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한다. 기존 금융회사 외에는 금융시스템 및 데이터에의 접근이 어려워 핀테크 기업 주도의 혁신적 서비스·상품 개발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Open API를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의 기능·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서비스·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고 낮은 비용의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 API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9a).

2. 문헌연구

2.1 오픈뱅킹 등장배경

2.1.1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가 된 오픈뱅킹은 유럽 연합(EU)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은행 등 계좌개설 기관의 지급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반인 지급결제 산업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과 201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지급결제 산업지침은 유럽연합 내 지급결제 시장을 통합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되었다(European Banking Federation, 2016). 최근 유럽은행 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이 개정한 PSD2는 지급결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2가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Choi and Lee, 2018). 첫째,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¹⁾,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²⁾ 등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소비자 계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위주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던 지급결제 시장에 핀테크 기업, IT기업 등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 촉진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에 관한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고객인증 등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제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EU는 역내 기업의 규제비용 경감과

- (1)지급인의 지급개시 요청에 따라 지급인의 은행 등 계좌개설 기관으로부터 지급정보를 송수신하여 온라인 판매업자 등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를 대행
- (2)금융소비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최근거래내역, 잔액정보 등의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요건,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개인이 은행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 권리의 보장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또한 소비자로서 서비스 제공자 변경(또는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 서비스가 고착화되는 현상(Lock-in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결과적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정보주체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1.2 금융서비스 디지털화

금융부문에서도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확산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간 금융업은 정보산업이면서 네트워크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IT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Bank of Korea, 2017).

그러나 <Fig. 2-1>에서와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 기술이 도입되면서 금융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및 구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및 비금융 회사의 역할 증대현상은 앞으로 크게 심화되면서 금융서비스가 금융회사 중심을 벗어나 다기화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을 포함한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수익성 정체, 고객과의 관계약화 그리고 금융업의 위상약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트렌드로 제기되는 위협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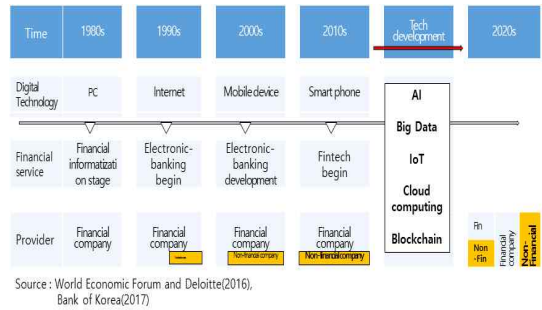


Fig. 2-1 Technology & Financial Service Change

2.1.3 정책적 당위성

국내의 정책당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혁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인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금융정책의 핵심은 금융결제망 등 금융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를 제3자에게 개방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개방형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9b).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고객 금융데이터는 금융회사의 규모별로 축적되는 데이터 양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상이하다. 대형 금융회사일수록 고객 금융데이터 축적량이 많고, 이를 효과적으로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 금융산업 내 지위가 공고해지게 된다. 반면 중소형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은 고객기반이 약해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충분하지 않아 경쟁에 있어서 열위에 놓인다. 디지털시대 경쟁력의 출발인 금융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충분히 활용하고 경쟁력 열위에 있는 혁신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픈뱅킹 도입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 및 경쟁 촉진과 결제망 개방을 넘어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시장구조 재편 및 금융서비스와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길 기대하고 있다. 예로써 그동안 고객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핀테크 기업은 고객이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별금융회사의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스크린스크래핑(Screen Scraping)기술을 사용해 왔다. 이 방식은 데이터 수집 속도가 느리며, 개별업체가 제휴한 금융회사에 한정되어 데이터가 집적되고, 일부 고객인증정보를 보관하여 사용하므로 고객인증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새롭게 채택한 신기술인 오픈 API는 고객 금융데이터 전송에 특화되어 데이터 수집 속도가 빠르며, 고객이 동의한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2 주요국의 오픈뱅킹 정책 동향

오픈뱅킹은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산 되었으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각국의 오픈뱅킹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 정보 제공과 함께 계좌 정보 제공, 지급지시 기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추진단계, 적용범위, API 표준화 여부 등을 보면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Jeong, 2019).

처음 시작한 영국은 유럽연합의 PSD2 시행에 발맞추어 자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정책이지만, 소수의 대형은행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에서 과점화된 소매금융 은행 시장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였다. AIB, Bank of Ireland, Barclays 등 9개 대형은행은 공통 API 프레임워크(Common API Framework)를 채택하고 고객의 명시

적 동의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3자에게 API를 통해 1) 상품정보, ATM 소재지 등 공공정보 2)잔액 정보, 거래기록 등 계좌정보 3)자금세탁 방지절차 관련정보 4)월 평균 현금인출 횟수 등 평균·집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준화된 API 요건 제정, 보안표준 결정, 참여기관, 민원 및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151개 업체(계좌제공자 56개, 제3사업자 95개)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뱅킹 API를 통한 호출건수도 190만 건(2018.6)에서 1억1,050만 건(2019.8)으로 크게 증가(<http://openbanking.org.uk>)하는 것으로 보아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호주는 4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사실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정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은행이 보유한 각종 예금상품은 물론 모기지, 기업금융, 개인대출 자산까지 공유할 수 있다. 사실상 실명인증 관련 데이터, 고객 ID의 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차 가공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API를 핀테크 업체들이 접근할 수 있다.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 간 1년 시차를 두고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직불카드, 예/적금, 결제계좌(2019.7/2020.7), 모기지(2020.2/2021.2), 개인대출(2020.7/2021.7) 순이다. 특이한 점은 호주의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급결제 등 실행형 API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조회형 API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픈뱅킹 정책 시행과정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수준 등 관리역량을 고려하여 데이터 개방범위와 시행일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 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유통의 기본 틀을 구축한 뒤 은행법 개정(2018.6 시행)을 통해 은행에게 개방형 API 구축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오픈 API 도입을 표명한 은행은 130개(약 94%)이고 이 중 95개 은행이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보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20년 5월에 은행과 계약된 스크래핑(Scraping) 방식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정보활용 업무를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는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핀테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금융 API 안내서(API Playbook)를 발표하여 공통 API 보안표준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산업 API 등록소(Financial Industry API Register)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개방된 API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내 Citi, OCBC, DBS 등 은행을 비롯하여 지급결제업체(NETS), 감독당국이 API 등록소에 참여하여 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약 313종의 API를 개방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이하게 은행뿐만 아니라 MAS도 감독 관련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Regtech)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오픈뱅킹에 관한 별도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 자율적 차원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감소를 위한 금융권의 정보공유를 위한 원칙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PSD2나 영국 CMA(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규정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검증된 제3자의 API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금융 거래 등 자신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2010년 발표된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소비자가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계좌,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소비자의 금융데이터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2017년 고객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략적인 원칙을 발표하였다. 2018년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는 100여개의 금융사와 함께 계좌정보의 공유, 결제, 사기방지 등을 위한 표준 API의 정의를 발표한 바 있다(Kim et al., 2019).

3.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

3.1 제도적 측면

한국형 오픈뱅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과 관련 규약을 개정하였다. 그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도 비즈니스 모델 구현 시 금융회사 권택 채널 부재, 금융회사와 개별 이용협약 필요, 서로 다른 전산 표준과 폐쇄적인 시스템 때문에 급변하는 핀테크 시장에서 신속한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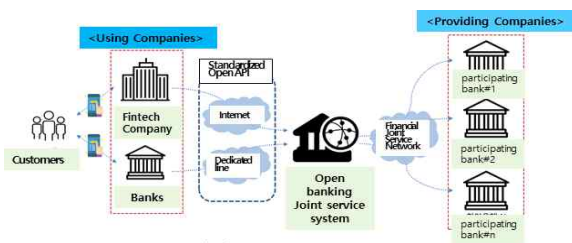
둘째, 금융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본인신용 정보관리업 및 지급지시 서비스업 영위 라이선스, 참여기관 상호간 협조와 비차별 의무를 포함한 이해상충 방지, 인증 및 보안기준, 사고 시 책임 관계 등을 규율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과 관련된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정책이 시행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기관이면서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은행은 오픈뱅킹의 일부 혜택도 누릴 수 있으나 은행 간 출금업체 서비스 허용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겠다.

3.2 시스템 측면

한국형 오픈뱅킹 시스템은 은행이 특정 핀테크 기업에 대한 API 접근 허용 및 통제가 용이한 개별 은행의 API 제공방식 보다 국가 차원의 공동플랫폼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Fig. 3-1>와 같이 공동플랫폼은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가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 시스템이다. 이용기관은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은행의 접속 효과를 가진다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2019b). 이용절차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용대상 여부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1) 이용승인 단계, 2) 서비스의 단위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기능테스트 단계, 3) 이용기관 및 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사전 보안점검 단계, 4) 수수료 책정, 이용한도 설정, 보증수단 등의 계약체결 단계, 그리고 5) 서비스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Source :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2019)

Fig. 3-1 Open Banking System Concept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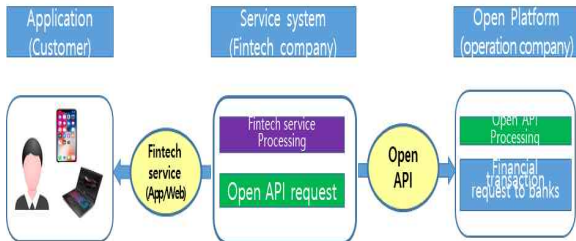
Diagram in South Korea

<Fig. 3-2>와 같이 보안관점에서 본 오픈뱅킹시스템의 구조는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웹 또는 모바일 앱, 서비스 처리 및 오픈 API를 요청하는 핀테크 서비스시스템, 오픈API 처리와 은행에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오픈뱅킹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8; 2019).

오픈뱅킹시스템에서 보안은 서비스의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특히 API는 데이터 액세스에 필요한 시스템 통합을 간소화 하지만 API 구현시 보안은 핵심요소이다 (Accenture, 2016). 전통적으로 API는 신뢰할 수 있는 B2B 통신으로 간주되었으나 디지털뱅킹과 유사한 보안 통제를 API에 적용해야 하고 복원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API의 공개는 기존 금융회사와 고객 간 정보를 송수신하던 구조에서 핀테크 사업자가 중간에 개입되는 형태가 되어 데이터 사용자와 관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이용자(고객)와 이용기관(핀테크 사업자) 구간에서는 오픈 API를 이용하는 핀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웹)이 실행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메모리 내 정보노출, 네트워크 구간 내 평문 노출, 화면 표시 및 화면 캡처를 통한 정보탈취, 이용자 입력정보 노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과 계좌정보, 금액 등 거래정보 위변조 방지와 인증 우회를 차단하는 보안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이용기관은 오픈 API 관련 정보처리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관리영역에서 정보보호 정책수립과 조직구성, 정보자산에 대한 식별과 관리, 주기적 취약점 점검 수행, 침해사고 대응절차 마련,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관련 로그 관리 등이 필요하다. 기술영역에서는 SW설계 시 보안요구사항 반영 등 개발보안, 중요 정보자산 및 단말에 대한

접근통제, 주요 시스템의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 방지 등 서버보안, DMZ 구간의 운용과 사설 IP 주소 사용 등 네트워크 보안이 요구된다.



Source: FINANCIAL SECURITY INSTITUTE(2019)

Fig. 3-2 Open Banking System Structure from a Security Perspective

4. 오픈뱅킹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본 장에서는 금융 정책당국의 보고서 등(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 Jeong, 2019)을 참고하여 오픈뱅킹 시행이 가져올 주요 변화를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관점에서 조망하고, 동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제도 운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업권과 금융당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1 오픈뱅킹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오픈뱅킹의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금융서비스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와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금융거래의 무게중심이 금융회사에서 고객으로 이동하게 된다. 국내 A은행의 경우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핵심성과지표(KPI)로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상품 판매실적 대신

고객수익률과 자산관리 안정성을 채택하고 경영 전 반에서 고객중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자기 금융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 고객은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다. 구체적 경우를 예상해 보면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단순 결제와 송금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및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로 금리와 부가서비스(자산관리서비스 등) 등의 조급이라도 혜택이 더 나은 쪽으로 고객이 이동하는 현상인 이른바 금융 노마드(Financial Nomad)가 보편화될 것이다.

<Fig. 4-1>,<Fig. 4-2>에서와 같이 국내 오픈뱅킹 실시 이후 일주일(2019.10.30~11.5) 동안 102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183만 계좌(1인당 1.8개)가 등록되었으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건수는 출금이체 22만 건, 잔액조회 894만 건, 기타 API 이용 299만 건 포함하여 총 1,215만 건(일평균 174만 건)을 기록하였다(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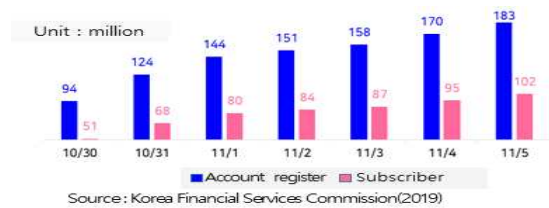


Fig. 4-1 Domestic Open Banking Registration·Join Trend



Source :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9)

Fig. 4 - 2 Domestic Open Banking API Usage Trend

금융산업 관점에서 나타날 변화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오픈뱅킹 시행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고객의 이동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3>에서와 같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2019.12.18.)에 따른 핀테크 기업 참여 이후 가입자와 등록계좌 수가 핀테크 기업이 기존 시장의 강자인 은행보다도 많은 것으로 보아 두 진영 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픈뱅킹이 오프라인 영업점에도 적용되면 주거래은행 개념이 사라지고 정보제공 동의서 한 장만 작성하며 이체는 물론 송금, 예·적금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은행 간 고객 쟁탈전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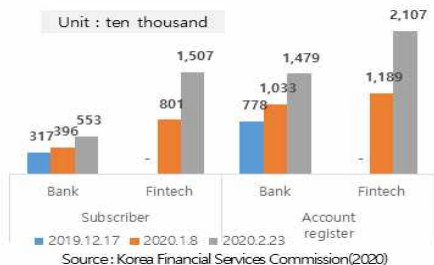


Fig. 4 - 3 Domestic Open Banking Trend (Bank-Fintech)

둘째, 오픈뱅킹은 기존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시켜 은행의 고객 독점력이 상실되면서 고객 접점이 은행에서 제3자 사업자로 점차 이동하여 금융상품의 생성과 판매의 분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Jeong, 2019). 예를 들면 고객의 동의에 따라 고객 정보가 외부의 사업자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자는 은행의 다양한 상품을 파는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역할을 수행하거나, 개인자산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외부 판매채널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은행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 등 개방성의 확대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다수의 고객 보유, 높은 사용빈도 유지, 시간점유(Time Share) 능력 등을 포함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시 은행에 영업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도 생겨날 수 있고, 외부 정보가 내부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4.2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4.2.1 오픈뱅킹 정책방향

국내의 오픈뱅킹의 현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오픈뱅킹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개방범위와 참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개방범위를 확장하고 핀테크 기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기회와 금융업권간의 제휴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Open Banking)을 넘어 오픈금융(Open Finance)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기관은 은행 중심이지만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계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용기관은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만 이용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 등 타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거래 채널은 비

대면 채널 금융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 대면채널(점포)로 확대한다. 이용계좌는 수시입출금 예금계좌와 투자자예탁금 계좌에서 적금계좌, 당좌계좌, 퇴직연금 계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고객 위주의 조회(4가지), 이체서비스(2가지)만 가능한 상황이지만 기업 계좌정보 접속을 통해 법인 간 이체, 기업자금 관리, ERP시스템과 연동 등 기업고객 대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오픈뱅킹의 제도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서비스 제공 시 근간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혁신법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오픈뱅킹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법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은행)의 참여, 이용료 등 제도의 안정성 및 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이 있다.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하고, 은행결제 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오픈뱅킹 서비스에 적합한 인증방법, 보안요건,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유럽연합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및 규제기술표준(RTS)에 의한 강력한 고객인증방법(SCA: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의 국내기준, 고객의 정보통제권(이동)을 강화하는 인증기준, 고객편의성 관점에서의 출금동의 방식 및 증빙자료 간소화 방법 등이 필요하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대체 정보를 통한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가 필요하지만 핀테크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과 인증 규제는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2 은행업권 과제

은행업권이 오픈뱅킹을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객 편의와 경험을 중시할 뿐 아니라 자기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에 기꺼이 데이터 제공에 동의할 것이다. 고객의 흠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중하고, 고객에 맞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차별화된 금융융합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후전략을 통한 개방 생태계 확보가 중요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2018)은 오픈뱅킹으로 인해 소매은행의 수익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15%에서 25%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화됨으로써, 핀테크 회사 등 새로운 진입자들의 활동 영역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파괴는 새로운 진입자가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뱅킹은 금융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마치 금융이 공기처럼 모든 영역과 비즈니스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는 고객 규모이지만, 오픈뱅킹 시대의 경쟁력은 생태계가 결정할 것이다. 플랫폼의 경쟁력이 은행의 운명을 좌우한다(Banking as a Platform, BaaP)는 인식 하에 오픈뱅킹 채널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오픈 API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Seo, 2018). 더 크고 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앞자리로 치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자신의 서비스를 외부와 잘 연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셋째, 개방성 확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 IT시스템 관련 운영 리스크, 결제 리스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데이터센터(Data Center) 관리자 입장에서 벗어나 능

동적인 서비스 제공자(Active Service Provider)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픈뱅킹에서 고객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모든 과정은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오픈 API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의 정보공유 요구 또는 지급지시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종전보다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고객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낮은 수준의 보안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와 금융범죄, 과부하로 인한 마비 및 처리지연 등의 시스템 안정성 저해, 핀테크 기업의 도산,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게 업무방식과 문화는 물론 평가 및 보상 체계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은행들은 저마다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포하며 디지털역량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내부 혁신은 지지부진하다. 경영진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공감대와 성과를 얻으려면 은행의 사업 영역과 고객 접점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며 업무환경과 성과 측정 및 평가 방식까지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2.3 금융당국 과제

금융당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성되는 오픈뱅킹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의 단계별 정보 공개와 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Jeong, 2019).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장 형성이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다양한 정보가 필요에 의해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공유하기보다 시차를 두고 장기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혁신서비스 장려를 위한 API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의 혁신금융 서비스와 연계성을 유지하는 등 일관된 규율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오픈뱅킹 확산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정보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장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결제 인프라 운영에 있어 신뢰와 안정은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안 점검, 일일 출금한도 설정, 보험가입 등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 대책과 엄격한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객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일이므로 감독당국은 이용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Seo, 2019; Jeong, 2019). 이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제도이다. 최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위해 기존은행 인가와 다른 ‘Small Banking Licens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업무범위 내에서 최소 자본금 규제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및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투자업에 도입한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최근 세계 주요국가에서 정부정책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픈뱅킹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10월 3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권이 조화와 자금이체가 가능한 하나의 공동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오픈뱅킹의 첫 발을 내딛었다. 오픈뱅킹 시대의 개막은 금융정보의 공유 확대를 통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은행 간,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와 다르게 초기에는 반짝 관심을 모을 수 있지만, 만약 기존 금융 앱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단순 조화와 계좌이체 이상의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픈뱅킹이 ‘찾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소비자의 고착된 결제방식, 제한적인 서비스, 보안 우려 등의 초기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지형 변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는 참여자 수와 서비스 개방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오픈뱅킹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EU와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 미비는 금융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파편화(Fragmentation)와 표준화(Standardization)의 결여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급결제 시장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운영적, 사업적 관점의 요구사항 추출 뿐 아니라 구현과 관련한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확립과 운용에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인프라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없다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

- [1] Accenture(2016.1), PSD2 & Open Banking Security and Fraud Impacts on Banks, Retrieved from <http://www.accenture.com/>
- [2] Agustín, C. (2018.12), Big tech in finance and new challenges for public policy, FT Banking summit London, Retrieved from <http://www.bis.org>
- [3] Bank of Korea(2017.1), Digital innovation and financial services future, 『지급결제조사자료 2017-1』, Retrieved from <http://www.bok.or.kr>
- [4] Boston Consulting Group(2018.10), Retail Banks Must Embrace Open Banking or Be Sidelined, Retrieved from <http://www.bcg.com/>
- [5] Choi, G. S. and Lee, J. Y.(2018.11),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uropean Union implementation of PSD2 on the financial sector, Retrieved from <http://www.kftc.or.kr> (최규선, 이지영(2018.11), 유럽연합의 PSD2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 69호』)
- [6] Deloitte(2017.6), Open banking : How to flourish in an certain future, Retrieved from <http://www2.deloitte.com/>
- [7] European Banking Federation(2016.10), PSD2 Guidance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Retrieved from <http://www.ebf.eu/>
- [8] Financial Security Institute(2018.4), PSD2 Regulatory technology standards content and implication,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12호』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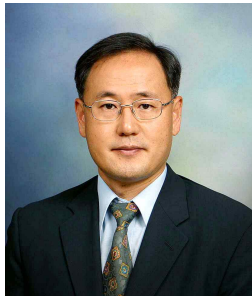
- 122~127), Retrieved from <http://www.fsec.or.kr>
- [9] Financial Security Institute(2019.6), Open banking security check detail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0]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9a.2), Financial Open API,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1]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9b.2), A study on the innovation of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to revitalize Fintech, financial platform,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2]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9c.11), The status of Open banking demonstration servi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3]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20.1), Trends after the full implementation of open banking,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4] Jeong, H. S.(2019.10), Introduction of Open banking and future challenges in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kif.re.kr> (정희수 (2019.10), 국내 오픈뱅킹의 도입과 향후 과제, 『하나금융포커스 제9권 20호』)』
- [15] Kim, G. L., CHO, M. J., & Choi, Y. G.(2019.5), Open banking—the rise of topographic changes in the financial industry, Retrieved from <http://home.kpmg/kr> (김규립, 조민주, 최연경(2019.5),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변화의 서막, 삼정KPMG ISSUE MONITOR 제108호)
- [16]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2019a.2), Open API System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in the banking secto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7]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2019b.6), Open banking joint operation current situati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fsc.go.kr>
- [18] Mckinsy & Company(2017.9), Data sharing and open banking, Retrieved from <http://www.mckinsey.com/>
- [19]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8.6),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uideBook, Retrieved from <http://www.kisa.or.kr>
- [20] Seo, J. H.(2018.12), Strategy for innovation the korea banking industry through Open API activation, KIF VIP 리포트, Retrieved from <http://www.kif.re.kr> (서정호 (2018.12), 오픈 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KIF VIP 리포트)
- [21] Seo, J. H.(2019.7), The rise of the Open banking era and future challenges, 『Retrieved from <http://www.kif.re.kr> (서정호 (2019.7),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8권13호』)』
- [22] <http://openbanking.org.uk>

Park, Jeongkuk (arspark@kftc.or.kr)



JeongKuk Park is a team manager of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Research Center. He received a BA from Hanyang University, and his MS and Ph.D from Dongguk University. He obtained many professional certificates such as CISA, CISSP, PMP, ISMS/PIMS, and PIA. He is currently interested in Electronic Finance, Fintech,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Kim, Injai (ijkim@dongguk.edu)



Injai Kim is a professor in the Dongguk Business School in Seoul, Korea.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n M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Seoul, and a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published several articles in Information & Management, Journal of MIS Research, and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His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adoption proces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 organizations, big data & social network analysis, IT mediated communication, U-wellness, and IT strategies.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Open Banking

Jeongkuk Park*, Injai Kim**

ABSTRACT

Open banking, the global trend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various innov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 in the future. The right policy direction and detailed tasks are important for triggering the differentiation and reun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background of open ban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Korea's open banking policy. Th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successful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open banking system are carefully suggested. Open banking is a policy to allow third party provider(TPP) access to bank accounts and open payment functions under the explicit consent of the customer. The opening of the open banking era is expected to beg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banks and fintech companies in earnest, thus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ntributing to the utility of financial consumers. To this end, policymaker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advance open-ended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open banking legal grounds, and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customer data leakage and poor financial system stability. Banks and fintech companies will need to focus on scattered customer financial information on a single platform and develop it into a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of true financial services.

Keywords: Open Banking,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Third Party Provider Accessibility,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 First Author, Head of Digital Certification Center,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